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 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목 차>

### 1. 과징금 부과기준 (부과기준율 설정 관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태현수
	담당부서 (과)	보험과		직급	5급
	국장	김태현		연락처	02-2100-2962
	과장	손주형		이 메 일	hstae@korea.kr

정 책 책 임 자 직 위

김 태 현 (서 명)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과징금 부과기준 (부과기준율 설정 관련)																		
	2.규제조문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3호, 제5호 및 제6호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196조 제4항, 은행법 제65조의4, 은행법 시행령 제26조의3																		
	4.유형	강화		5.규정변경예고	2017.8.16. ~ 9.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 부과한도액 구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체감 증가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변경하여 과징금 효과 제고 <input type="checkbox"/> 과징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그 부과방식 등을 민간 자율에 맡기기 어려움																		
	7.규제내용	<input type="checkbox"/>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체감구조로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도입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h>의견 수렴방식</th><th>의견 내용</th></tr><tr><td>피규제자</td><td>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 모집종사자 등</td><td>보험회사(57개) 임직원(58천명) 및 모집종사자 등</td><td>규정변경예고</td><td>-</td></tr><tr><td>이해관계자</td><td>금융소비자 및 관련 단체, 금융감독원 등</td><td>-</td><td>TF 운영, 규정변경예고 등</td><td>-</td></tr></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 내용	피규제자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 모집종사자 등	보험회사(57개) 임직원(58천명) 및 모집종사자 등	규정변경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소비자 및 관련 단체, 금융감독원 등	-	TF 운영, 규정변경예고 등	-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 내용															
피규제자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 모집종사자 등	보험회사(57개) 임직원(58천명) 및 모집종사자 등	규정변경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소비자 및 관련 단체, 금융감독원 등	-	TF 운영, 규정변경예고 등	-																
9.기대효과	과징금 부과 합리성 및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행정제재 처분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을 생략																		
기타	12. 일몰 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1. ~ 2. (생략)</p> <p>3. 과징금 산정방식</p> <p>가·나. (생략)</p> <p>다. 법정부과한도액에 <u>기본부과율</u>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p> <p>라. 기본과징금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 및 위반행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p> <p>마·바. (생략)</p> <p>4. (생략)</p> <p>5. 기본과징금의 산정</p> <p>가. 법정부과한도액에 <u>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법정부과한도액</th><th style="text-align: center;">기본부과율</th></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 (1단계)</td><td style="text-align: center;">× 7/10</td></tr> <tr> <td>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단계)</td><td style="text-align: center;">× 7/20</td></tr> <tr> <td>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3단계)</td><td style="text-align: center;">× 7/40</td></tr> <tr> <td>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4단계)</td><td style="text-align: center;">× 7/80</td></tr> <tr> <td>2천억원 초과 (5단계)</td><td style="text-align: center;">× 7/160</td></tr> </tbody> </table> <p>&lt;산정례&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법정부과한도액</th><th style="text-align: center;">기본과징금</th></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td>법정부과한도액 × 7/10</td></tr> <tr> <td>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td><td>2억원 × 7/10 + (법정부과한도액 - 2억원) × 7/20</td></tr> <tr> <td>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2억원 × 7/10 + 18억원 × 7/20 + (법정부과한도액 - 20억원) ×</td></tr> </tbody> </table>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2억원 이하 (1단계)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단계)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3단계)	×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4단계)	× 7/80	2천억원 초과 (5단계)	× 7/160	법정부과한도액	기본과징금	2억원 이하	법정부과한도액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억원 × 7/10 + (법정부과한도액 - 2억원)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억원 × 7/10 + 18억원 × 7/20 + (법정부과한도액 - 20억원) ×	<p>1. ~ 2. (현행과 같음)</p> <p>3.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 <u>부과기준율</u>을 곱하고, 위반행위의 기간을 고려하여--.</p> <p>&lt;삭제&gt;</p> <p>마·바.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2억원 이하 (1단계)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단계)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3단계)	×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4단계)	× 7/80																				
2천억원 초과 (5단계)	× 7/160																				
법정부과한도액	기본과징금																				
2억원 이하	법정부과한도액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억원 × 7/10 + (법정부과한도액 - 2억원)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억원 × 7/10 + 18억원 × 7/20 + (법정부과한도액 - 20억원) ×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2억원 × 7/10 + 18억원 × 7/20 + 180억원 × 7/40 + (법정부과 한도액 - 200억원) × 7/80
2천억원 초과	2억원 × 7/10 + 18억원 × 7/20 + 180억원 × 7/40 + 1,800억원 × 7/80 + (법정부과한도액 - 2,000 억원) × 7/160

## 6. 기본과징금의 조정 (1차 조정)

### 가. 원칙

기본과징금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 위반자의 고의·과실 및  
위반행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자의  
고의·과실 등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유형별로 아  
래와 같이 기본과징금을 조정  
한다. (1단계 조정)

구 분	고 의	과 실
중대한 위반행위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120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75
보통의 위반행위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75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50
경미한 위반행위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50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25

<위반행위 경중의 판단 기준>

## 6. ----- 산정

### <삭 제>

나

-----  
-----  
----- 법정부  
과한도액에 아래 표의 부과기  
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구 분	고 의	과 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100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75
중대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75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25

<위반행위 경중의 판단 기준>

위반내용 및 정도	판단기준
중대한 위반행위	(생 략)
보통의 위반행위	(생 략)
경미한 위반행위	(생 략)

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행위  
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  
라 아래와 같이 1단계 조정후  
의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한다. (2단계 조정).

위반행위 등의 기간	조정금액
3년 초과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50
2년 초과 3년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20
1년 초과 2년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10
9개월 초과 1년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00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50
3개월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25

## 7. 기본과징금의 조정 (2차 조정)

가. 일반원칙

(1) ~ (3) (생 략)

나. (생 략)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생 략)

위반내용 및 정도	판단기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현행과 같음)
중대한 위반행위	(현행과 같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현행과 같음)

다

-----  
-----  
----- 같이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1차 조정)

위반행위 등의 기간	조정금액
3년 초과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50
2년 초과 3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20
1년 초과 2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10
9개월 초과 1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0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3개월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5

7. -----

가. -----

(1) ~ (3)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

(1) (현행과 같음)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생략)

8.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나. (생략)

<신설>

(2) -----  
-----  
-----  
----- 100분의 30-----.

(3) -----  
-----  
-----  
-----  
----- 100분의 50-----.

(4) (현행과 같음)

8.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감경 사유 조정 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p>다. 기타</p> <p>(1) ~ (3) (생략)</p> <p>(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5) (생략)</p>	<p><u>감액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u></p> <p><u>라. 기타</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할 수 있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p> <p>(5) (현행과 같음)</p>
--	--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행)** 현행 규정은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산정한 기본과징금을 가중·감경 및 조정하여 최종 부과액을 결정

- 기본부과율은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법률상 부과비율)이 커질수록 체감\*\*하는 구조

\* (예시) 기초서류 위반(보험금 미지급 등) :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 × 50%

\*\* (2억이하) 7/10 → (2~20억) 7/20 → (20~200억) 7/40 → (200~2,000억) 7/80 → (2,000억 초과) 7/160

<b>법정부과한도액</b> (위반금액 × 부과비율)	× 기본부과율	<b>기본과징금</b>	± 가중·감경 및 조정	=	<b>과징금 부과액</b>
---------------------------------	---------	--------------	-----------------	---	--------------------

□ **(추진배경)** 법령위반의 내용·효과 등의 중대성과 상관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구간별 기본부과율을 점차 낮게 적용하여 과징금 과소부과 소지

- 법정부과한도액 구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체감 증가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하여 위반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 부과되어 징벌·제재 효과 부족

- 공정위·방통위 등 타부처에 비해 적은 금액이 산정되는 구조

-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는 "부과기준율"을 도입\*

\*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

□ **(정부개입 필요성)** 과징금은 위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 환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제재로서, 그 부과한도 등을 민간 자율에 맡기기 어려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새로 도입

-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

\* 위반결과(매우중대·중대·경미)와 동기(고의·과실)를 따져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산출

$$\boxed{\text{법정부과한도액}} \times \text{부과기준율} = \boxed{\text{기본과징금}} \pm \text{가중·감경 및 조정} = \boxed{\text{과징금 부과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 공정위도 당초 관련 매출액이 커질수록 부과기준율이 체감하는 방식이었으나, '04.4월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정하도록 개정 [과징금부과 세부기준(고시)]

□ **(선택 근거)** 부과기준율 도입 등 금전제재 합리화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제재개혁」('15.9월)의 일환

-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율 도입으로 과징금 부과금액이 인상될 여지가 있으나,
  - 법령위반의 내용·효과 등의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로 과징금 제도의 합리성으로 제고하고
  - 업권 규모 및 타 기관 사례에 비해 경미했던 금전제재를 현실화하는 수준으로 인상 수준도 타 법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방통위·공정위의 과징금 산정기준과 유사하여 법률 간 과징금 부과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 미국 등 선진국도 과징금 산정 시 고의성 정도 등 위반의 중대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하는 측면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실무진과 TF를 구성하여 3차례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특이사항 없음
금융회사 등	규정변경예고로 의견 수렴	특이사항 없음

## 3. 기대 효과

- ☐ 과징금의 기계적 산정으로 사안별로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거나 대형 금융사고·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금전제재 금액이 턱없이 낮아 “숨방망이 제재”라는 비난이 많았음
- 위반행위·효과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해 과징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써 부과대상자의 수용도를 제고하고
- 금융회사의 위반행위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득에 비해 현저히 적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기대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규제목적)** 금융회사 및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합리화 및 강화를 통해 유사 위법행위를 억제하여, 금융회사의 신뢰성, 금융시장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편익을 제공

- **(규제수단)** 과징금 부과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 등 타업권 및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 < 금전제재 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관련 >

- ① **(미 국)** FDIC가 채택한 민사제재금(Civil Money Penalty) 산정 가이드라인은 과징금 부과에 있어 14가지 요소를 점수화하여 8단계별 조치 부과

\* 고의성, 금전이익 취득, 과거 제재, 과거 동일위반, 손실 정도, 미해결 상태 위반건수, 통지전 위반의 지속정도, 통지후 위반의 지속정도, 은폐, 기타 약영향, 주주 및 소비자 손실, 상환 정도, 선의, 협조

구 분	0	1	2	3	4	가중치
고의성 여부	없 음		미필적 고의		명백한 고의	5
금전이익 취득여부	없 음			간접적 금전이득	직접적 금전이득	4
과거 제재	없 음	유사한 위반으로 주의	주의 및 지적사항	양해각서, 감독서한	중지명령, 협정, 과징금	3
:	:	:	:	:	:	:

점수별 고려 가능한 해당 조치 및 과징금 부과액	
점 수	고려 가능한 조치
0 - 30	보고 생략 가능
31 - 40	감독서한(supervisory letter) 발송
41 - 50	1,000달러 초과 5,000달러 이하 과징금 부과
:	:
120 -	125,000달러 이하 과징금 부과

② **(영국)** FCA는 5단계\* 제재금(Financial Penalty) 결정과정을 거치며 2단계에서 중대성을 평가

\* 1단계: 부당이익 환수, 2단계: 위반의 중대성을 반영한 금액 결정, 3단계: 2단계 금액의 가중·감경, 4단계: 위반행위 억제를 위한 상향조정, 5단계: 제재금 감액 협의(30% 이하)

- 위반행위의 영향, 본질, 고의성·과실 등 요소별 검토를 통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
-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전체 수익의 0%(Lv.1), 5%(Lv.2), 10%(Lv.3), 15%(Lv.4) 20%(Lv.5) 중 “관련성 있는 수익” 결정

중대성의 정도	판단기준
위반의 중대성이 높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소비자, 투자자, 시장참여자 등에 중대한 손실 또는 손실의 위험이 발생</li> <li>- 금융기관 내부통제절차 또는 경영시스템 등에 심각한 위험을 노출시킨 경우</li> <li>- 금융범죄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경우</li> <li>- 해당 금융기관의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게 한 경우</li> <li>- 위반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신중하지 못하게 발생한 경우</li> </ul>
위반의 중대성이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위반행위로 이득 또는 손실회피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li> <li>- 소비자, 투자자, 시장참여자 등에 대한 중대한 손실 또는 손실 위험을 발생시킨 정도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li> <li>- 시장의 신뢰와 질서에 대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력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li> <li>-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또는 취약성과 관련된 증거가 없는 경우</li> <li>- 위반행위가 부주의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li> </ul>

< 금전제재 부과사유·부과금액 및 사례 >

- 주요국의 금전제재는 금융당국의 폭넓은 재량권 하에 거액의 금액을 부과

- **(영국 · 미국)** 영국은 Financial Penalty, 미국은 Civil Money Penalty의 단일 구조로 우리나라의 과태료 ·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전제재를 부과
  - 우리나라는 과태료 · 과징금이 적용되는 영역 · 부과요건 · 부과 금액 등을 구분하고 있으나,
  - 영국과 미국은 금전제재 부과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법령 또는 감독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액부터 고액까지 부과 가능
  - 영국은 부과금액의 상한이 없으며\*
    -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으로 규정
  - 미국은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 기간 1일당 상한액을 규정
    - \* 위반행위 1일당 (1단계) \$7,500 / (2단계) \$37,500 / (3단계) \$1,425,000
  - 미국이나 영국은 금융당국의 폭넓은 재량권 하에 거액의 과징금 등 금전제재를 부과해 옴
  - '16년 세계 최대은행인 웰스파고에 대해 고객명의 무단도용 등 사유로 CFPB(미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가 \$1억(1천억원), OCC가 \$3.5천만(3.5백억원), LA City가 \$5천만(5백억원)의 민사제재금을 부과
  - '13년 미국 금융당국은 JP모건에 대해 신용파생상품 투자관련 리스크관리 부적정 등 사유로 SEC가 \$2억(2천억원), FRB가 \$2억(2천억원), OCC가 \$3억(3천억원)의 민사제재금을, 영국 금융당국은 £ 1.4억(2천억원) 등의 민사제재금을 부과

- '11년 SEC는 내부자 거래 관련 캘리언 펀드 설립자 라자라트남에 대해 부당이득인 \$5천만(5백억원)의 약 2배에 가까운 \$9천만(9백억원)의 민사제재금을 부과

○ (독일 · 일본)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관련 법률에서 금전제재 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독일은 과태료 · 과징금을 구분하지 않고, Bußgeld라는 단일 금전 제재 체계를 운영하고 법률로 상한액을 설정(최대 100만유로)
-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과태료 · 과징금\*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위반법인을 대상으로 한 고액의 벌금형(최대 30억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및 공인회계사법에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국은 금융법 위반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은 물론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 금전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빈번히 제기됨

○ 타법사례

□ 금융법 외 타 법(공정거래법 · 정보통신망법) 사례 분석

○ 공정거래법 · 정보통신망법

- ①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부과기준율(3%)로 기본과징금 산정
- ② 가중·감경·조정을 거쳐 최종 부과액 결정

☞ 위반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대출액을  
관련 대출액으로 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금액이 크게 증가

## □ 금융법 사례 분석

○ 금융법 상 과징금 부과한도는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어 징벌·제재 효과 부족

⇒ 최근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 등 개정('17.4.18, '17.10.19 시행)을  
통해 과징금에 대해 「법정부과한도액」을 약 3배 인상\*

\* 예: 2%→5%, 10%→30%

※ '14.1월~'16.10월, 지주, 보험, 자본시장, 저축은행, 여전 등 총 5개 법률 위반  
과징금 215건 분석 결과, 개인에 대해서는 16건, 건당 1,713만원을, 법인(금융  
회사, 기업)에 대해서는 199건, 건당 15,104만원을 부과하여 부담능력 수준  
고려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 Ⅲ. 규제 의 실효성

#### 1. 규제 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제재개혁」(15.9월)의 일환

- 강화된 규제로 인해 발생할 과징금 금액도 타기관, 해외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워 피규제자의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

##### ○ 규제 차등화 방안

☐ 과징금은 동일 권역의 기관 등이 행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됨

####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번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함

- 또한, 기존의 과징금 산정체계 하에서 기본부과율 대신 부과기준율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인력 소요 없음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의 과징금 산정체계 하에서 기본부과율 대신 부과기준율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을 통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및 부과금액 인상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의 후속조치임
- 방안 발표 후에도 피규제대상자인 금융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2차례(’15.12월, ’16.10월)에 걸친 제재개혁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심층인터뷰 등)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수렴하였음

###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 3. 종합결론

- 금번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제재개혁」정책의 일환으로
-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뢰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목표 달성 기대